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첨단산업 이끌 미래 주역 키운다

도, 전북대·현대차와 지역 성장엔진 분야 핵심인재 양성 협약 체결

퍼지컬 AI·로봇·에너지 분야 교육·연구협력 기반 조성 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학교,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퍼지컬 AI와 로봇,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에서 전북대학교, 현대자동차와 지역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대학 교육·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선제적으로 육성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퍼지컬 AI·로봇,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교육·연구 협력 기반 조성 △현대자동차 수요 기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기술협력 포럼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등에 적극 협력한다.

특히 계약학과는 현대차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계약학과 이수 학생의 채용 연계 여부와 방식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새만금 개발과 성장엔진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산업 현장과 대학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도는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는 도내 13개 대학과 함께 5국3북 초광역 공영대학 운영 및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도내 13개 대학 총장이 참석해 지역 대학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대학들은 교육과정과 유·무형 인프라를 상호 개방해 대학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학업,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인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초광역 공영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엔진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한편, 유학생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두 건의 협약이 서로 연계되면서 지역 산업과 대학, 글로벌 인재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결합될 경우 전북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키운 성장엔진 분야의 인재가 산업을 견인하고 우리 고장에 뿌리 내릴 때 더 큰 전북을 이룰 수 있다”며 “도·대학·기업이 함께 손잡고 청년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도 한시적 체류자가 아닌 도민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배우고 일하며 머무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만호 기자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 해상풍력 지원항만 지정

해수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돼

군산시, 76·77번 선석까지 지정 확대 방안도 협의키로

군산시는 20일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 초대형 기자재의 제작·보관·조립·운송과 해상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항만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이번 반영으로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과 연계한 항만 기반을 확보하면서, 군산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항은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해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비롯한 전북·충남 등 서해안권 해상풍력 사업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기반과 연계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형 기자재의 보관·조립·운송에 필요한 항만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상풍력 설치 지원항만으로 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군산시는 지난 3월 1.02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에 이어 이번 해상풍력 지원항만 반영까지 더해지면서, 발전단지와 항만을 함께 갖

춘 서해안 대표 해상풍력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군산시는 해상풍력 산업 규모 확대에 대비해 76·77번 선석까지 해상풍력 지원항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5번 선석의 설치 지원 기능과 76·77번 선석의 기자재 야적·보관·조립 등 배후 기능을 연계해 보다 완성도 높은 해상풍력 지원항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집적화단지와 군산항, 배후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자재 제작부터 조립·운송·선적·해상 설치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 투자유치와 기자재 기업 집적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 지정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연계한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76·77번 선석 확대 지정과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가, 군산항을 서해안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청정수소 산업 국가 지원 확대

민주 박지원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0일, 제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청정수소

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가운데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저장·운송·유통·판매·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수소의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와 융자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10만호 기자

